'원 팀'으로 뭉친 K-조선… 미국發 'LNG 특수' 선점 나선다

美 시장 공략, 미래 선도 준비

한화오션, 친환경 선박 시장 주도
HD현대重,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
삼성重, 수주 경쟁서 기술우위 확보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해 2024년 인도한 17만 4천㎥ 급 LNG 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아시아를 중심으로 LNG 수요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글로벌 LNG 수요가 향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며 차세대 LNG 운반선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기조가 국내 조선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LNG 수출 재개를 추진함에 따라 LNG 운반선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내 조선사들은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앞세워 '트럼프 특수'를 누릴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친환경 기조를 강조해 온 바이든 대통령은 신규 LNG 시설 건설에 제동을 건 상태다. 글로벌 LNG 시장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LNG 수출이 기후변화와 경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뒤집어 관련 프로젝트가 개발에 돌입할 경우 100척 이상의 LNG선 신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척당 4000억원에 육박하는 LNG선 가격을 고려했을 때, 연간 20조원으로 추정된 미국 함정MRO(보수·수리·정비) 시장 이상의 특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화석 에너지 강화를 언급함에 따라 원유·LNG 운송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한국 조선사의 LNG운반선, 유조선 수주 확대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내 조선사들은 LNG 운반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전세계에서 발주된 LNG 운반선 29척을 한국이 전량 수주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한화오션은 차세대 연료탱크와 무탄소 연료 기술, HD현대중공업은 LNG 냉열 활용 기술,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과 FLNG 분야 글로벌 선두 등 지위를 바탕으로 각 사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시장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발 LNG선 특수로 일감 수주가 증가하면 조선업계 슈퍼사이클(초호황기)가 3년 이상으로 늘어날것 이라는 의견도 팽배하다. 앞서 업계에선 2027년 이후 수주 물량이 감소해 호황기 대비 꺾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더욱이 8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빚어왔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가 향후 미국 시장 공략에 가속을 붙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양사가 '원 팀'을 구축할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다.

한화오션은 지난 22일 KDDX 입찰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했던 고발한 사건을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인 경찰 수사로 사업 자체가 늦어지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국내 조선업계에 러브콜을 보내며, 양사가 상호 보완과 협력의 디딤돌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MRO 분야에서 한국 조선업을 콕 집어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한 만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이 공격적인 투자로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조선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체 간 상호 협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의 LNG 운반선 수요 증가와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국내 조선 업계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LNG 운반선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적 우위와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AI 기본법' 형식적 심사에, 기술적 허점… "무용지물 될 것"

국힘 채택 'AI 기본법' 심사소위 통과
짧은 심사과정 등 업계·시민단체 반발
"법안 설계에 현장 목소리 반영 부족"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이달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국민의힘은 AI 기본법을 처음으로 심사소위를 통과시키며 연내 입법을 준비 중이다. 업계에서는 법안 심사가 형식적이라는 혐의와 더불어 이미 구형이 된 기술이 법안에 탑재 되는 등 부실한 법안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마침내 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 등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108인 전원이 공동발의한 1호 당론법안이다.

필요성이 제기 된 2022년부터 어영부영 미뤄지고 있었던 만큼 고무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대다수 업계 관계자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형식적인 심사를 했다는 혐의와 함께 중요한 쟁점 조항은 빠지는 등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다.

24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처음 심사소위를 통과한 'AI 기본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AI 기본법은 AI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개발·활용·산업육성·악용 등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토대가 되는 기본법안이다. 국민의힘이 통과시킨 법안 외에도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4건 발의한 바 있다. 심사소위까지 통과한 사례는 이번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 통과시킨 입법안이 처음이다.

법안을 통과시킨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AI경쟁력 제고와 세대·소득 간 디지털 격차 없는 나라, 가계 통신비부담 완화를 위해 오늘 소위에서 통과되었던 법안들이 2024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형식적인 의견수렴과 심사를 거쳤다는 혐의와 최근 업계에서 비판 중인 다양한 기술적 허점을 거대로 수렴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 측은 "국회는 인공지능의 위험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수많은 쟁점을 다루는 이 제정법을 절차적으로 충분히 심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AI 기본법 통과 전 단 두차례 심사소위가 개최됐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과방위는 지난 9월 3일 7개 법안을 대상으로 심사소위를 개최했고, 19개 발의안을 대상으로 한 심사소위는 지난 11월 21일 처음 열렸다. 이렇듯 짧은 시간 내 급박하게 진행 된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한 충실한 축조 심사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회의록은 마지막 주중 나올 예정이다.

기술적 허점에 대한 비판은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가장 문제적인 요소로 지적되는 것은 AI 사업자에 불법·딥페이크 생성물을 막을 의무를 강화하고, AI 생성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워터마크(식별표시)를 삽입해 명시하도록 한 부분이다.

AI 생성물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모든 관계자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해당 워터마크는 데이터 생성 단계에서 AI 저작물임을 밝히는 데이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비가시적인 방안이 대다수며 가시화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가시화 했을 때 생성형 AI의 활용 의의가 사라진다는 판단에서다. 비가시적인 방안은 더욱 문제적이다. 실제로 워터마크가 삽입된 AI 저작물은 일반인이 이를 확인할 방안이 없다. 특수한 프로그램을 거쳐 확인해야 하는 만큼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때 워터마크 기법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독풀기(Poisoning Attacks)' 또한 현재 AI를 이용한 독풀기 기법의 규칙성으로 인해 AI를 이용한 파훼가 이뤄진 상태다.

업계 관계자 A씨는 "현재 AI 저작물과 딥페이크 범죄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워터마크 삽입과 독풀기(Poisoning Attacks) 등 대부분의 기법이 파괴된 상태"라며 "법안 설계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는지, 연구 결과를 확인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서현 기자 seoh@

국내 청소년 SNS 단속 본격화… "육아계정 상업이용도 막는다"

인스타그램·유튜브 새 정책 도입
인스타그램 '10대 계정' 국내 출시

국내서도 미성년자 소셜네트워크(SNS) 규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은 '육아 계정'들을 잇따라 삭제하는 등 단속 강화에 돌입했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내년 안으로 10대 계정을 국내서 출시할 예정이다. 유튜브도 10대 청소년 이용자 활동 제한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최근 사회 주요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청소년 SNS 중독과 육아 계정을 상업 활동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인스타그램의 사용자들에 따르면 일부 부모들이 운영하는 육아계정이 사전 고지 없이 비활성화되거나 삭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보호정책을 더 강화한 데 따른 조치이다.

그룹 크레용팝 출신 소율은 지난 19일 딸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된 소식을 전했다. 소율은 "우리 잼잼이(딸 애칭) 인스타그램 계정이 갑자기 비활성화됐다"고 밝혔다. 소율은 "예쁜 사진·영상과 팬분들께서 그려주신 그림들이 다 없어졌다. 너무 속상하다"고 호소했다.

현희 남편 제이쓴도 지난 20일 자신의 계정에 "준범이 계정 돌려주란 말이야"라며 아들 준범이의 인스타그램이 일시 정지 됐다고 밝혔다. 제이쓴은 이후 일시정지가 풀리자 영구 비활성화 조치를 막기 위해 세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을 자녀 계정에 올렸다.

이는 최근 청소년 SNS 중독과 육아 계정을 상업활동에 이용하는 사례가 전 세계 사회 주요 문제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이에 인스타그램 최근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인스타그램은 정책상 만 14세 이상의 가입만을 허용하고 있다. 14세 미만 어린이가 가입하려면 계정 소개에 부모 등 성인 관리자가 관리하는 계정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10대 계정'(Teen Account)을 내년 중 한국 등 전 세계 국가에 확대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정은 청소년에게 민감한 콘텐츠 노출을 제한할 수 있고 '부모 감독 툴'을 통해 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 사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특징이다.

지난 5일 열린 '유스 세이프티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라 메타 아시아태평양 안전 정책 총괄은 "14~15세는 비공개 계정으로, 부모가 '감독 툴'을 통해 기능을 풀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5~16세는 본인들이 원하면 계정을 풀 수 있다"며 "청소년 프라이버시를 위해 메시지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부모가 자녀가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